

광주·전남 행정통합 되면 시·도민 삶 어떻게 바뀌나...

산업 대전환 ‘일자리 증가’...교통·주거 등 삶의 질 개선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

김영록 지사 “행정통합, 광주·전남에 재정 인센티브”
전남광주특별시 명칭 논란에 “특별시 출범 후 논의”
청사 문제부터 단체장 권한, 재정까지 질문 잇따라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통합이 왜 필요한가”를 묻던 단계는 지나. 이제는 “통합되면 권한은 어디까지 집중되는가”, “재정은 언제까지 보장되는가”, “광주의 이름과 역할은 어떻게 남는가”라는 보다 구체적인 쟁점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지난 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지역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은 이러한 변화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통합특별시의 명칭과 청사 문제부터 단체장 권한 집중, 재정 지속성, 청년 일자리와 생활 변화까지, 행정통합 논의가 보다 세부적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행사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개 토론회로, 광주 동·서·광산구 주민과 기초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방송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는 사전에 준비된 발표보다 현장 질의응답에 상당한 시간이 배정됐고, 시민들의 질문 역시 찬반을 가르는 감정적 표현보다는 통합 이후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짚는 데 집중됐다.

행정통합이 더 이상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생활과 권력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통합 논의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행정구역을 단순히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발언권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과 지역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광주와 전남이 각자의 한계를 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을 통해 확보되는 재정과 권한을 어디에, 어떤 우선순위로 배분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 서구·광산구·동구’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 행정통합에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사안은 통합특별시 명칭과 주청사 문제였다. ‘전남광주특별시’라는 명칭이 광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청사 소재지에 따른 행정 중심지 이동 가능성이 지역 위상과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청사 문제는 어느 한 곳으로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청사를 유지하면서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향이 기본”이라며 “의회 소재지와 상징적 결정은 새로 구성될 특별시의회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행정이 미리 결론을 정해두기보다는, 제도 출범 이후 의회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보다 직접적인 언급을 내놨다.

임 구정장은 “통합이 곧 광주가 사라진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시민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6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 서구·광산구·동구’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 행정통합에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느끼는 불안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전략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특별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하나의 정책 단위로 육성하는 전략과 광주 5개 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고유한 역사와 기능을 살리는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목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지역 기간 이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재정이 단기토목 사업에 소진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지역 특성과 산업 육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원 기간 이후에도 재정 분권을 이어갈 수 있는 항구적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통합의 실익은 반감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년 일자리와 생활 여건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김 지사는 광주의 인공지는 산업과 반도체 패키징 산업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산과 경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가 마련

돼야 통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 역시 “의회의 입법과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재정 문제는 통합 논의의 현실성을 가늠하는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중앙정부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이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재정이 단기토목 사업에 소진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지역 특성과 산업 육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지원 기간 이후에도 재정 분권을 이어갈 수 있는 항구적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통합의 실익은 반감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년 일자리와 생활 여건에 대한 질문도 빠지지 않았다.

김 지사는 광주의 인공지는 산업과 반도체 패키징 산업을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를 산과 경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가 마련

이에 대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일자리는 고용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문화까지 함께 접근해야 청년이 머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 이후 권역별 성장 전략과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활과 직결된 재정 구조 문제도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광주 자치구와 전남 시·군 간 보통교부세 구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도농복합도시인 광산구 주민들이 농민수당과 각종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병규 구정장은 “같은 시민이라면 지원 기준도 같아야 한다”며 통합 이후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이 행정 효율뿐 아니라 생활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요구다.

지역 상권과 대형 개발 사업의 관계도 논의됐다. 북향쇼핑몰 조성에 따른 상권영향과 상생 방안에 대해 김이강 광주 서

구청장은 상생기금 조성과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구상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 역시 쇼핑물 수익 일부를 상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 상품 전시·판매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발과 지역경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의 향후 과제로 남았다.

광주송정역 일대와 광주공항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지 개발이 아닌 체류형 공간과 산업 거점 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지사는 “통합 논의는 제도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지역의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타운홀 미팅으로 광주에 대한 민원, 숙원사업을 알게 됐다”며 “광주공항, 송정역, 금호타이어 부지의 활용 가치가 높은 만큼 시민들에게 미래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영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제22회 영산강사랑사·도민

*** 제10회 나누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한마음 걸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행운권 추첨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자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까지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업국 T. 062)370-7090
※ 우편 시에도 전달합니다.
※ 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도리투데이** (사)광남문화재단 **전라노인**

후원 (예정): **나주시** **나주시 임업후계자협의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회** **전라남도지하철공사**